



제281회 임시회  
**시정질문 · 답변**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  
(일괄질문 · 일괄답변)입니다.



## 이 한 영 의원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 대전을 위한  
하천정비와 노인전용주택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 이 한 영 의원

### ◎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만년동지역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을 위해 우리 시 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상황과 노인 주거복지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양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극한호우는 일상화되고 있고 매년 수해는 반복되면서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시도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와 홍수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데 이런 수해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표적 재해예방 수단으로 하천 준설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도 지난 7월 갑천 상류에 위치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방마을에서 시간당 최대 60.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갑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은 침수되었으며 27가구에 사는 30여 명의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정림동에서 집중호우로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만에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시장님,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의 핵심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물이 범람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물이 흐르는 면적인 통수단면이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대전은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준설이 시급한 곳이 수십여 곳 이상이지만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로 인해 2011년 4대강 정비사업 이후 2019년까지 하천 퇴적토 등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전 3대 하천은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나마 대전시는 지난 2020년 극심한 수해를 겪으면서 예산 20억 원을 편성해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에 대해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대전에선 집중호우로 아파트와 전통시장 등이 물에 잠겨 2명이 숨지는 사고를 겪었고 예산 수립 당시엔 하천 준설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했기에 대전천과 유등천 일부 구간과 이듬해 정림동 인근 갑천 일부 구간에서 하천 준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대 하천의 준설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일부 구간의 준설작업만 진행한 채 준설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일상화된 극한호우 대응을 위해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지류·지천을 정비하고 홍수 방어 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유역면적이 크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직접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를 위해서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국가하천 19곳을 중심으로 준설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치수의 제1번은 하천 준설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 발생한 데 대해 하천 준설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동맥경화가 생긴 것 아니냐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서 터지는 것이라든가 똑같은 것이라며

준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대전시도 지난해 3대 하천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유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33개 교량 주변에 대해 대대적인 준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하천 준설사업이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되다 보니 국비 확보가 저조한 상황에서 준설사업은 지연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늘어나는 홍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준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3대 하천이 국가하천이다 보니 유지관리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환경부로부터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 정비의 핵심개념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천 준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최대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름 강수 패턴이 늦여름과 가을에 집중되는 국지성 집중호우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태풍의 위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을 경고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 피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처럼 장마가 끝난 후 후속조치로 취해지는 하천 정비로는 홍수를 예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가 증가하는 홍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려면 하천 준설 외에도 홍수방어 인프라 강화와 함께 조기 경보시스템 강화 등 치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중적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하천 준설 이외에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홍수 예방 대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주거복지 보장을 위한 노인 전용주택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주거 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의 노인인구가 농촌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은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주거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비율이 56%에 달했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하기보다는 의료·편의시설이 인접한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높은 집값과 임대료는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전용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주거환경을 마련하지 않으면 노인의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큼니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사회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 사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전의 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전용주택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대표적인 노인 전용주택인 노인 복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복지주택은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대전에는 도룡동에 위치한 사이언스빌리지 1개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은퇴 과학자 및 그 가족에게만 입소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일반

노인들은 입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곳에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서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그런 조건을 갖춘 주택은 턱도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 7월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에게 적합한 주거공간에서 가사·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친화적 주거공간을 말합니다. 정부가 기존의 노인 전용주택이 노인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고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공공이 임대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민간 주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노인 복지시설 기능이 포함된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으로 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제안드리고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시에서 주도하는 노인 전용주택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올해 노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병원과 역세권에 3천 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수요가 큰 노인들의 특성을 반영해 병원과 편의시설이 인접한 지역에 안심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으로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여 지역 프로그램과 연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이 입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주거수요가 형성이

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시가 주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설치한다면 신뢰성과 규모를 갖춘 노인 전용주택 건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인구가 많고 주로 활동하는 생활권역을 파악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편의시설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용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방치·공실상태인 건물 및 부지를 활용한 노인 전용주택 설치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립에 따른 예산 마련의 한계가 있다면 기존 건물이나 부지를 대전시가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6월 서울시의회에서 폐교를 노인 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폐교가 주거시설과 인접해 입지하고 있고 노인 거주 필수요건인 병원 근접성과 교통 편리성에 부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노인 복지주택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외에도 부산의 동명대, 광주 조선대에서 학교 유휴부지 내 교육·의료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일본 야마구치현에서는 도산 위기의 호텔을 리모델링하여 고령자 맞춤형시설로 조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우리 시도 필요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여 노인 전용주택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노인 전용주택 설치와 관련한 노인 주거복지 정책은 규제, 부지·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자 진입이 어렵고 시설·서비스 다양성 부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도 기존의 한계를 넘어선 정책 수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노인주거 문제는 단순히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공간적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홀로 사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 전용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노인가구 중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가구를 서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독사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고독사 예방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대전시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나이가 들어서도 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류 주거복지도시 대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서는 2년간 우리 3대 하천 준설 작업을 위한 국비 확보방안과 치수대책 및 노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전용주택 건립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안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는 3대 하천이 있습니다만 3대 하천에 대한 준설이 1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하상고가 상승돼 있는 상황에서 요즘 기후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저희도 사실 이미 대대적인



준설을 착수를 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대로 빠르게 준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3대 하천에 지속적인 준설을 하려면 우리 시는 최소 59km는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33개의 교량 주변에 대대적인 준설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금년에 17개 교량 주변을 준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46억 원이 확보돼서 현재 9개 교량 준설을 이미 마쳤습니다만 추후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장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대대적인 준설이 왜 필요한지, 대전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환경부장관께 직접 제가 친전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구간의 준설을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빠르게 홍수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은 우리 시가 꼭 해야 되는데요.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준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3대 하천 유등천, 대전천, 갑천 상황을 보면 사실 아마 여러분도 다니시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하상 중간에 물 흐르는 것이 퇴적물이 쌓여서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또 수양버들이 너무 커서 물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신속한 준설이나 일부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언제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극한홍수에 대비하려면 시설물도 점검해야 되겠고 또 준설도 해야 되겠고 재난이나

예방시스템 또 경보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난 우려가 큰 수문이나 제방 등 36개에 대해서 시설물안전법 점검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재난감시 CCTV, 자동음성통보시설, 수위계 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홍수 방어 기반시설 대폭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일부 승격시켜서 정부 재정을 통해서 준설할 수 있도록 또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나 홍수위험지도 활용 대피계획 마련, 3대 하천 내 저류조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선 이번 여름에 수해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미 서구 용촌, 봉곡동에 제방이 유실돼서 34세대 6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농경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침수가 됐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8개 교량에 교통통제를 했습니다.

갑천 같은 경우는 만년 · 갑천 · 원촌교, 유등천은 침산 · 안영 · 복수 · 가장교, 대전천은 대흥교 같은 경우가 교통통제를 했고요.

어쨌든 12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보니까 상당히 위험수위에 오르는 곳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까지 준설한 원촌교 같은 지점을 보면 준설할 때보다 한 75cm 정도 준설 후에 수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원촌교 하류 같은 경우는 준설해 보니까 한 63cm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3대 하천 전 구간 59km에 대해서 준설을 대대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한 8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저희는 2026년,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되면 한 2027년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km는 이미 준설을 완료했고 금년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희가 7.5km

정도를 추가 준설하게 되고요.

금년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추가적으로, 2개월 정도 추가해서 한 8.6km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예산입니다, 예산.

전체 내년도까지는 20km 정도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9km 간은 2027년도까지는 준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환경부가 국가하천을 관리하다 보니까 준설 설계할 때도 환경부가 기존에 있던 수위, 전체 바닥 면적을 더 깊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흔쾌하게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기존에 있었던 기준치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환경부장관한테 그 당위성을 제가 친전으로 했고 환경부하고 협의만 되면 좀 더 설계를 제대로 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예방의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올해보다 더 비가 많이 집중적으로 왔을 경우 가장 위험한 곳들이 일단 중구하고 서구 지역에, 유천동이나 이런 경우는 사실 독방보다 낮고 이쪽 가장동이나 변동, 도마동 이쪽도 독방보다 훨씬 낮은 쪽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넘치면 아주 대량 피해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1차적으로 대전천변을 1단계로 대부분 준설하고 유등천에 일부 급한 곳 하고요.

2단계는 가능하면 유등천 쪽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3단계는 갑천 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2027년 정도까지 완전히 완료해서 근본적으로 홍수 조절기능을 제대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단체들이 걱정을 합니다만 사실 장마가 한번 지고 나면요, 다 떠내려갑니다, 위에서 다 쓸려 내려오고 해서.

환경단체들이 얘기하는 것도 때로는 여러 가지 저희가 참고할 일도 있지만 또 지나치게

현재 보존하는 쪽으로는 안 되고 최우선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고 그러면서도 환경을 최소한, 아끼면서 사람과 환경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하여튼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난번에 보니까 대전천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을 하면서 전임 시장 때는 공론화 위원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1년, 2년씩 시간을 끌어서 정책결정을 시장이 안 하고 그 책임을 공론화위원회에 떠넘기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정책결정을 사실 해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시민들이 시장을 뽑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부 대표성이 정확히 있느냐 없느냐도 구분할 수 없는 분들에게 그 결정을 맡겨서, 그건 저는 그런 현상이 사실상 정책결정 책임을 미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그 책임에 따라서 명확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전시는 앞으로 그런 정책결정은 해야겠다.

예산심의권도 의회에 있지만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하천 준설문제는 명확하게 시장의 정책결정 능력을 십분 발휘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한영 의원님께서서는 노인 전용주택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인한테 들은 얘기 중에 서울에 노인 전용주택에 입주해서 월 500만 원쯤 냈는데 함께 노인들끼리 사시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살다가 얼른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인들끼리 전체 모여 살아서 하시는 게 과연 아주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임대주택 같은 경우 지금 1만 3천 호 이상의 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이 많이 하시게 되고 또 고령층이 많이 가시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연세가 드셨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영구임대 그 전체 주택가가 어른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그러면 잘못하면 전체 도시의 한쪽은 예를 들면 노인인구가 집중하는 이런 현상,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이나 어른들이 지하철역 가까운 곳, 청년주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 곳들에 유희시설 부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역세권은 워낙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가장 이용하기 좋은 곳에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과 제도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복지부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 다 얹혀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관련해서는 보니까 금년 하반기까지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 같고요.

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나 건물을 확보했을 경우 하는데 사실은 운영하는 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안전성이나 주거의 안정성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또 개인주택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이 들어갔을 때 개인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고 해서요.

그런데 가끔 저희 집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나이가 먹으면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는 데 가서 이렇게, 그런 공동주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꿈에는 그게 굉장히 좋아보일 것 같아도 또 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특히 어른들을 위한 노인 전용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규제 개혁이나 또 중앙정부가 제도 개선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른들한테 가장 좋을 건가, 어른들만 모아서 사시게 하는 게 좋은지 섞어서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충분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말씀하신 도룡동 사이언스빌리지도 저도 보니까 이게 민간재원을 57억 정도 들여서 2018년도에 마무리한 건데요.

정원이 4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291명 들어가 있다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영구임대는 1만 3,525호, 행복주택이 또 한 1,800세대 있습니다. 국민임대, 매입임대 이런 데 가보면 대개 노인들께서 많이 사십니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과거 대한민국 경제가 급팽창하면서 연금문제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노년이 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이 슬럼화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효율적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과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주택개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하고. 또 지금 이한영 의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정책방향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설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인 전용 주택 건립을 체계적으로 저희도 검토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심 있는 의원님과 정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지원을 잘 받도록 해서 대전시가 앞으로 미래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